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와 한일관계

—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접속 —

스카와 히데노리(須川英徳)

I. 시각의 설정	V.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原像
II. 유라시아에 있어서 동아시아 세계의 위치	VI. 17세기 일본을 둘러싼 대외관계의 재편 속에서의 한일관계
III.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	VII. 17~18세기 동아시아에서의 朝日무역
IV.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특수성	VIII. 맺음말

I. 시각의 설정

본 논문에 부과된 과제는 위의 제목 그대로이며, 여기에 부제를 달아서 ‘통신사와 왜관의 의의를 포함하여’가 붙어 있다. 이 과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분해하여 새롭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일본의 연구에 기초하여,

1. 17~18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개괄한다.
2. 동아시아 세계 속에서 한일관계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위상과 성격에 관하여 고찰한다.
3. 통신사와 왜관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중에서 1과 3에 관해서는 한일관계사 연구로서 많은 일본사 연구자, 대외관계사 연구자들의 정밀하고 방대한 연구 축적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문외한인 본인이 무언가 실증적이며 새로운 지식을 부가하는 것은 곤란한 작업이다. 그리고 개론적인 정리라면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와 쓰루타 게이(鶴田啓) 등 한일관계사 연구자들의 훌륭한 개설서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미 제1기의 학설사 정리보고 및 문헌목록에서 3번의 통신사를 다루고 있으며, 제2기의 학설사 정리보고에서 왜관에 관한 문헌목록을 포함한 보고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2번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영역임과 동시에, 보고자가 전문으로 하는 경제사 연구의 취급영역과 일부이기는 하지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①17~18세기의 국제환경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 내지는 특성이 어떤 것이었는가? 최근의 일본에 있어서 역사 연구, 특히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에 대한 관심 동향에 유의해 가면서 세계사적인 공간 속에서 고찰해 간다. 이것은 한일관계도 역시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 두 나라 사이의 관계사 연구에서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기도 할 것이다. 이때 17~18세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전 및 다른 지역의 사정도 언급할 것이다. ②이어서 그와 같은 틀 안에서 한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한다. 다만 보고자가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한일관계사 연구라는 분야의 방대한 축적 속에서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밸런스를 잃은 것이 될 것이다.¹⁾ ③그리고, 양국의 정치적·문화적 교류와 정보유통의 매체 또는 장소였던 통신사와 왜관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언급할 것이다.

관련된 문헌목록은 제1기, 제2기의 학설사 정리보고에서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본 보고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

Ⅱ. 유라시아에 있어서 동아시아 세계의 위치

유라시아에는 고대부터 문명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몇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

1) 입수하기 쉽고, 더구나 읽기 쉬운 개설서로서 17~18세기의 쓰시마(對馬)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鶴田啓, 《對馬からみた日朝關係》 일본사리플렛41 (山川出版社)가 잘 정리하고 있으며, 통신사, 왜관에서의 교역, 한일 간의 상호인식 등에 관해서는 三宅英利, 1993 《近世アジアの日本と朝鮮半島》 (朝日新聞社)가 있다. 또 왜관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2002 《倭館》 (文春新書)가 상세하다. 에도(江戸)시대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概説을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들 서적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 참고문헌도 이들 서적에 소개되어 있다.

슬람이 흥룡하기 시작한 이후의 아시아는 크게 보아 서쪽에서부터 건조한 기후와 이슬람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 북부와도 연결되는 서아시아 지역, 인도의 힌두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남아시아 지역, 고온다습하고 많은 섬과 반도로 이루어진 해양적 세계의 동남아시아 지역, 온난하며 옛날부터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과 동시에 벼농사를 전개해 온 동아시아 지역, 그 북부 지역에서부터 서부에 걸쳐 위치하는 초원지역으로 유목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였던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내륙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 살펴보면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의 기독교적 세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여러 지역은 내륙의 교통로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하여 아라비아해에서 인도양,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 걸친 인도양 해역에 주요한 활동기반을 갖고 있던 이슬람계와 힌두계 등의 상인들에 의하여 연결되며, 그 해상 교통로의 끝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은 동아시아 해역까지도 뻗어 있었다.

동아시아 세계에서 보자면 동쪽은 태평양, 북쪽은 동시베리아의 삼림지대로 구획되지만 동북부는 半農半獵의 여러 민족이 거주하며, 다른 문명권으로 향하는 교통로는 육로로는 유목계의 여러 민족이 거주하며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건조지대와 서쪽 및 서북쪽으로 전개된 초원지대, 해로로는 동남아시아 지역 또는 말레이반도를 돌아 인도양 해역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적으로도 매우 크며, 주변의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에 다양한 영향을 끼쳐 왔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에 공통되는 요소로서 문자로는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의 사용²⁾을, 사상과 신앙은 중국에서 기원한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북방에서 전래된 漢譯佛經의 수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뿐만 아니라 온대 몬순이라는 기후적 공통성이 유사 이래 중국 長江 중하류와 교류하면서 벼농사라는 공통성도 가져다주었다. 농업에 있어서 높은 공통요소는 농산물을 주된 재료로 하는 음식문화에서도 쌀을 주식으로, 여타의 식품을 부식으로 여기는 음식 개념,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풍부하게 사용(된장, 간장, 두부 등³⁾)하는 등 다

2) 중국 주변의 제민족이 한자문화를 받아들인 결과로서 한자를 의식해 가면서, 각각의 언어와 합쳐서 고유문자를 만들어 낸 사례는 많지만, 西夏文字·契丹文字·女真文字(金代에 만들어진 것, 滿州文字와는 다름), 그리고 베트남의 추놈 등은 모두 한자의 字體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언어에 맞추어 고안한 것이었는데, 왕조의 멸망과 함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중단되는 일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일본의 仮名文字와 한국의 한글인데, 모두 한자 어휘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양한 면에서 공통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열도에서 국가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에 있어서 선진문화의 섭취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해도, 한반도 경유 내지는 한반도로부터의 사람의 이동과 함께 일본열도의 기층문화에까지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에 기원하며, 그리하여 이후의 송·원 시대에 활발했던 일본과 중국의 직접 교통이 주로 寧波(明州)를 비롯한 長江 하류 유역의 항구도시 사이에 맺어졌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언하자면, 동일한 동아시아 세계 내지는 유라시아의 동쪽 끝이라고 해도 몽고와 여진(및 여진에서 나온 만주족)은 한자와 유학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자는 위구르 문자 계통의 문자를 채택했고, 종교는 티베트불교를 신봉했다. 반대로 지금의 베트남 북부에 성립했던 여러 왕국(남부에는 인도문화의 영향이 강한 占城[참파]이 존재했다)은 한자와 유학, 漢譯佛經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李朝 베트남 이래 유학에 기초한 과거시험도 실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⁴⁾ 문자의 전파에서는 기층적인 생활문화의 상이함 뿐만 아니라 유력한 지식인 집단인 종교지도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의 문자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도 크게 존재했다. 일본열도에 성립했던 여러 정권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지리적 사정 때문에 정권의 내부적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중국과 교섭을 갖고 외교·교역관계를 성립시키지만,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일본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이 높았다. 또 중국 쪽에서도 일본열도의 정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필요성은 희박했다. 이미 구와노(桑野)의 보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엄격한 책봉체제를 시행했던 명대에 조선이 1년 3공, 류큐(琉球)가 1년 1공 또는 2년 1공이었던 것에 비하여 일본은 10년 1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책봉관계조차도 계속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

3) 여기에는 특히 일본의 경우, 불교 승려가 중국과 왕래하면서 가져온 것도 많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차, 饅飩(짬만두) 등도 역시 승려를 매개로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4) 베트남사에 관한 개설서로는 石井米雄·櫻井弓躬雄 편, 1999 《東南アジア史①(新版世界各國史5)》(山川出版社)를 참고하였다. 베트남은 李朝(1010~1225), 陳朝(1225~1400), 黎朝(1428~1527, 1532~1789. 단 후기는 莫氏, 이어서 鄭氏가 담당하는 허울뿐인 국왕이었다. 17세기의 베트남은 분열, 남부는 阮氏의 廣南國이 廣南國王을 칭했고, 참파(占城)를 멸망시켜서 자국령으로 삼았지만 淸은 이름뿐인 黎氏를 안남국왕으로 계속 책봉했으며, 광남국왕을 책봉하지 않았다. 阮朝(1802~1945) 모두 국호를 大越로 정하고 나서도 중국왕조로부터는 安南國王으로 책봉되었는데(阮朝 성립 후인 1803년부터 국호, 책봉왕호 모두 越南과 越南國王이 된다), 국내적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阮朝 시대에도 주변의 여러 왕국에 대하여 “독자적인 小朝貢圈을 형성하고”(217페이지, 櫻井弓躬雄 집필 부분), 캄보디아에는 印綬를 주고 3년 1공을 명했다.

상 최고 권력자=국왕이라는 책봉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조건마저도 천황을 중화 황제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내부의 이해와, 천축(인도)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중화를 상대화한 썸인 불교가 중세에 진행된 神佛習合과 함께 神國 日本至上主義를 주장하고 있는 등, 유교적 교양을 갖춘 관료가 아니라 주자학 등에도 정통했던 禪宗 승려가 외교 실무에 관여했던 일본에서는 반드시 자명한 이해사항은 아니었다. 더구나 武家政權이 천황 권력을 능욕하고, 무가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일본에 있어서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 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천황에게 복종하는 장군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⁵⁾

그러나 천황을 그 구성원에 포함하는 교토(京都)정권과, 장군으로 대표되는 武家政權의 관계는 그 소재지뿐만 아니라 기능과 구성원리가 다르고 관할 영역도 다른 두 개의 정권이며, 원래부터 관제상의 상하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왕권이 일본열도에 서로 상호 의존해 가면서 병존하고 있으며, 점차로 후자가 전자의 관할 영역을 잠식하고, 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요컨대 중국식 관제로는 바로 번역하기가 불가능한 통치기구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도 중국식 관제로 번역할 수 있으며, 대중국 관계에서는 국왕으로서 책봉관계 속에 있었던 베트남과 고려 초기의 대응과도 크게 다르다.

Ⅲ.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연구 경향으로서 이른바 웨스턴 임팩트(Western Impact) 이전의 시기, 그 중에서도 대략 10세기 이후에 있어서 아시아 각 지역의 통합의 형태와 상호관계 등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구미와의 접촉에서 오는 충격의 크기와 여기에 계속되는 사회와 국가체제의 격변으로 감춰져 버린, 그 이전의 각 지역 내의 시스템과 지역 간의

5) 천황과 장군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인식되는 것은 주자학적인 대의명분론이 일본의 무사 지식인에게 침투되고, 러시아의 접근에 따라 대외적인 위기의식이 높아져 가던 18세기 말 이후이며, 가마쿠라(鎌倉)막부의 발족 이래 교토정권(가마쿠라막부 발족 당시는 천황이 아니라 그 父系의 천황 경험자 중 1명이 권력을 장악하는 院政이 시행되고 있었다)과 무가정권은 기능과 구성원리가 다르고 관할영역이 다른 두 개의 정권이며, 상호의존적인 타원의 두 초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천황과 장군 중 어느 쪽이 위고 아래인가 하는 물음 자체가 원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심의 형태는 2국사적인 관계사 연구의 성과를 더한 결과로 생겨난 것은 아니며, 역사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다.⁶⁾ 구체적으로는 윌러스틴이 제시했던 ‘세계 시스템론’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는 의문 속에서 생긴 동향이기도 하다.⁷⁾ ‘세계 시스템론’에 따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고대부터 몇몇 문명권이 제각기 ‘세계 경제’로서 병존하고 있었지만, 유럽인이 주도한 16~17세기의 대항해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주도에 의한 ‘유럽 세계 경제’의 형성과 이에 따른 지구 규모의 교통과 시장이 성립했고, 그것이 근대 세계 경제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산 향신료를 구하기 위한 아시아 도항과 금은을 구하려는 신대륙 도항이었지만, 차츰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신대륙과 서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을 연결하는 교역 시스템이 확대되고, 변두리가 된 신대륙의 은·사탕, 서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 半 변두리가 된 동유럽의 곡물을 서유럽 중심으로 묶음으로써 유럽으로의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세계 시스템의 중핵인 서유럽과 주변의 종속지역(半 변두리, 변두리)이라는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적인 분업과 교역 시스템의 형성이다. 중핵도 처음부터 선진적이며 중핵이었던 것은 아니며, 반 변두리와 변두리 역시 시장에 대한 세계경제의 접근과 진입의 결과로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통치기구와 경제가 변용해 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8세기에는 기호라든가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감퇴하지만, 커피·차·사탕·면포 등 아시아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신상품 교역이 확대되고, 인도에서 들어오는 면포 수입을 저지하는 수입 대체화 형태로 영국의 면직물업에 서부터 소위 산업혁명이 시작한다. 이 확대되는 영국의 면화 수요에 대응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남부와 이집트가 면작지대로 변모해 간다. 다른 한편, 중국산 차에 대한 수요는 수입 대금으로서 은을 대신하여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판매한다. 그 결과로서의 아편전쟁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불평등조약⁸⁾ 체제의 개시는 동아시아 지역 또한 19세기 후반에

6) 이하의 기술에서 一國史的인 연구의 의의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호 연관적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간 동아시아의 경우, 개개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던 동아시아적인 시스템을 상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 간의 관계를 모색하지 않는 한, 一國史的인 역사 전개의 특성마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으로서의 ‘화이질서’의 존재만 지적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구체적인 사람과 물건, 기술, 사상 등 다양한 위상에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7) 임마누엘 윌러스틴, 川北稔 역, 1981 《近代世界システム》 I・II (岩波書店). 原著은 1974년. 역자인 가와키타 미노루의 ‘머리말’이 윌러스틴의 이론을 매우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는 근대 세계 시스템 속에 종속적으로 포섭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월러스틴의 ‘세계 시스템론’은 그때까지의 유럽 근대를 기준점으로, 그곳에서 도출되는 한 나라의 역사적 발전단계론과 각 단계에 있어서 사회구성체를 설정하고, 그것과의 상위 혹은 근대화 달성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 발전의 모습을 추량한다는 마르크스주의 내지는 그 방법에 따르는 역사 접근방법에 대하여 개발경제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A.G.프랭크와 S.아민 등이 제시한 ‘중심부와 종속적 주변부’론, ‘저개발에 대한 개발’론의 논의 속에서 탄생했고,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근대 세계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립되고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 설정 방식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해답에 대하여도 역시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판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촉발되어 부상해 간 논점이 다양했다. 특히 16세기를 유럽이 패권을 향해 가는 분수령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16~17세기의 아시아 국가의 역량과 풍부함을 보다 높게 보는 논의가 주목된다.⁹⁾ 가와키타 미노루(川北稔)는 “16세기 이후의 ‘대항해’로 초래된 ‘일체로서의 세계’가 17세기 후반 이후의 ‘상업혁명’으로 유럽인이 아시아 등지의 상품을 대량 소비하는 형태(‘생활혁명’)를 성립시킨 것이며, ‘세계의 일체화’의 첫 단계는 ‘아시아 시대’였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이러한 아시아 상품의 국산화, 요컨대 유럽에 있어서 아시아 상품의 수입 대체로서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그것이 ‘유럽 상품’이 되어 반대로 아시아로 유입하게 되었다”고 요약하며, “이 두 가지 시대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럽인의 생활 문화에 아시아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된 근세, 공업화 이전의 움직임이었다”고 한다.¹⁰⁾ 또한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에 따르면, “유럽을 모델로 했던 한 나라의 역사적 발전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근대 세계 시스템론이 다시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¹¹⁾가 오늘의 역사연구이며, 새로운 글로벌·히스토리화 새로운 시대구분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 모색중이다.¹²⁾

8) 불평등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업상품의 매입과 현지상품의 자유로운 수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저율의 협정관세, 내지통상의 자유)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재판권, 무엇보다도 최혜국 대우에 있는데, 이와 같은 불평등조약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남경조약(1842년)과 미일수호통상조약(1858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체결된 영국과 오스만투르크의 통상조약(1838년, 발타·리만협약), 영국과 타이의 조약(1855년, 방콕조약)이 원형이다. 毛利健三, <イギリス資本主義と日本開國> 石井寛治・關口尙志 編, 1982 <世界市場と幕末開港> (東京大學出版會)

9) 岸本美緒, <時代區分論の現在> 歴史學研究會 編, 2002 <歴史學における方法的轉回 元代歴史學の成果と課題 1980-2000> (青木書店) 84~85

10) 川北稔, <輸入代替としての産業革命> 懷徳堂記念會 編, 2008 <世界史を書き直す 日本史を書き直す> (和泉書店) 30

11) 岸本美緒, <위 논문> 85

특히 동아시아에 관해서는 16세기 전반에 유럽인과 접촉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도양 해역과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난 사태의 진행과는 달랐다. 그 접촉으로 유럽인이 즉 시 해상교역의 일정 정도를 장악하고, 교역 거점을 중심으로 내륙으로 진출하면서 지역을 지배하는 형태로 진전되지는 않았고,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일본과 중국의 통치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허가된 범위 안에서, 때로는 굴욕적인 요구를 감수하는 통교자로서 만족해야 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교역 거점을 기점으로 점차 지배영역을 확대하고, 19세기 중반에는 이미 영역 지배권력, 즉 식민지 통치 권력으로 전화하고 있었다. ‘세계 시스템론’에 따르면 이 같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시스템에 종속적으로 포섭되었을 때가 그 지역의 ‘근대’의 기점이 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경우는 접촉에서 종속적 포섭까지 3세기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¹³⁾

이와 같은 史實에 주목한다면, ‘세계 시스템’으로의 통합·포섭의 경위도 반드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시스템에 상응하는 다른 진입 방법, 포섭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중남미의 예를 들자면, 잉카제국의 멸망에서 보듯이 선주민의 국가를 스페인에서 침입한 소수의 군대가 철저히 파괴한 뒤에 재물을 탈취하고 주민을 노예화하는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했지

12) 예를 들면, 그 시도의 하나로 ‘海域아시아사’라는 새로운 영역도 개척되어 있으며, 《海城アジア史研究入門》(桃木至朗 편, 2008 岩波書店) 총설에서 ‘海城アジア史研究の3つの主戦場’으로 (1)‘自國史’의 쇄신과 ‘對外關係史’, ‘海上進出史’ (2)‘東洋史’, ‘東西交渉史’, ‘大航海時代史’의 쇄신과 海城史, (3)근대사의 쇄신과 세계시스템·아시아 교역권을 들고 있다(4-8쪽). 한편, 14세기에 몽고의 유라시아 통합을 세계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는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의 일련의 연구(예를 들면 일반용의 새로운 책으로 2008 《モンゴル帝國と長いその後(興亡の世界史21)》(講談社)이 있으며, “‘海進’에 의한 글로벌화의 진전이라는 논리에는 陸上을 향한 시각과 지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同書, 105쪽)고 비판한다.

13) 이 타입택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 하고,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永井和, 2007 <東アジア史の‘近世’問題>, 夫馬進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가 논점을 잘 정리하고 있다. 또 그는 자신의 견해로 1) 세계사의 흐름을 ‘多세계 → 단일세계’로 파악하는 ‘多세계론’, ‘세계구조전환론’의 입장에서 2) ‘세계구조 전환의 프로세스’를, 지역 레벨에서의 세계의 일체화 → 유라시아 규모에서의 세계의 일체화 → 지구 규모에서의 세계의 일체화라는 3단계로 나누고, 3) ‘지구 규모에서의 세계의 일체화’가 시작되어 ‘일체화된 세계’가 형성되기까지를 넓은 의미에서의 근대로 하고, 이것을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로 하고, 4) ‘근대’를 근세와 좁은 의미에서의 근대로 나누며, 5)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도 아시아가 서구보다 우위에 있었던 18세기 무렵까지의 시기가 근세, 6) 그러나 근세의 세계경제가 단일의 세계경제였는지에 대하여는 보류, 7) 따라서 근세 아시아에 대한 ‘근대 세계시스템’에 의한 포섭론에 관하여도 보류한다고 하였다.

만,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중국과 일본으로 건너온 포르투갈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없었다. 결국 단순히 거리적인 원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있어서 독자적인 사회형성 정도와 각 지역이 지역 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지역이 외부와 어떻게 관계해 왔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가 ‘근대 자본주의 세계’로 포섭된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전에 서로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각기 어떠한 사회를 전개해 왔는지, 그리고 외부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해명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한일 양국 간의 관계사 역시 동아시아 세계 속의 존재이며, 글로벌 히스토리의 일부인 것이다.

IV. 17~18세기 동아시아 세계의 특수성

그와 같은 관점에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하여 관찰하기 전에 일본과 한국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오늘날의 주권국가인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틀을 과거로 소급시켜서 전근대의 양국 관계를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 영역이 17세기 초의 시점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는 분단이라는 사정을 제외하면 조선왕조가 지배했던 영역과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18세기 말에 에도막부가 직접·간접으로 통치영역으로 삼고 있던 범위와 비교했을 때, 18세기 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예조치(蝦夷地)를 幕領으로 삼고, 다시 막부 말기의 1854년에 체결한 러시아와의 조약으로 홋카이도(北海道)와 이른바 북방4도를 일본령으로 삼고(다만, 그 북방인 치시마열도[千島列島]와 사할린[樺太]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메이지(明治) 초에 류큐를 영토로 편입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일본’으로 인식하고 있던 영역과는 달리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그때까지는 경계적이었던 지역을 ‘일본’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청일전쟁 이후에 획득했던 타이완과 한반도 등의 해외영토는 제2차대전의 패전과 함께 모두 상실했으며, 그 결과로서 18세기 말과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일본’과 ‘한국’이 자신의 영역과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치 유사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향마저 있다.¹⁴⁾ 더군다나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했던 ‘쇄국’ 체제가 오래 존속했기 때문에 양국 모두 소수의 이주자와 선주민(한국에는 없지만)을 제외하면 거의 단일의 에스니시티(Ethnicity)로 성립된 듯한 민족구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주도, 일본에서는 오키나와가 모두 예전에는 별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날도 의식의 강약에 차이는 있지만 ‘육지’, 야마토(大和)’로 스스로의 사이에 미묘한 구분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균일한 국민을 만들어 내는 일에 힘을 쏟았던 근대 교육제도를 고도로 보급한 결과 지역차와 지방차 역시 크지 않다는 사정까지 겹친다.

그러나 현대와 과거의 국가영역의 중복성이 높고, 여기서 생기는 현대의 시선으로 과거와 현재의 역사, 그 중에서도 國家史에 대하여 연속성을 당연하고 암묵적인 전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그런 생각이 가능하도록 굳게 믿어버리는 사정은 매우 특수한 관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장황한 이야기지만 17세기 초엽의 시점에서 세계사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아메리카에는 북미 선주민 외에 유럽에서의 이민이 시작 되었을 뿐이며, 중남미에 존재했던 잉카와 아스텍 등의 선주민 국가는 스페인인에게 멸망당한 상태였다. 유럽에서도 오늘날의 영역과 비교적 유사한 나라는 프랑스뿐일 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리적인 명칭 밖에 없었고,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라는 별개의 국가였다. 발칸과 이집트, 알제리 등 중동에서 북아프리카까지가 여전히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출하여 이제 막 우랄산맥을 넘으려던 때였다. 인도 내륙지방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굴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다. 중국도 만리장성 이북은 요동을 제외하고 여진족과 몽고족의 땅이었으며, 티베트와 위그루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

요컨대 현대 세계 각국의 국경을 생각할 때, 17세기 초의 국경과 거의 일치하는 국가를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은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에서도 그 원형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며, 중국도 오늘날과는 크게 달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일본조차도 류큐와 홋카이도는 아직 ‘일본’이 아니

14) 그러나 완전히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오키나와현에서 ‘오키나와사’를 취급하는 고등학교 용 교재가 ‘일본사’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명백할 것이다. 또한 ‘兩屬’하게 된 류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메이지 초기에는 반드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해 둔다. 근대에 있어서 홋카이도와 류큐의 취급에 대해서는 小熊英二, 1998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제1~3장 참조. 메이지 초기에는 개발과 유지비용을 이유로 류큐 포기와 홋카이도 매각을 주장하는 신문 사설마저 있었다.

었다. 인종·언어·풍속·종교 등을 함께 하는 집단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한, 혹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현상인 것이다. 또한 그렇게 설정된 국경이라는 틀 속에서 국가는 한층 더 문화적인 동질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그 기원을 소급시켜서 근대 국민국가 이전부터의 언어적·문화적·혈연적 공통성과 ‘고유의 민족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더욱이 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국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명확하게 구획된 영토를 가짐과 동시에 소속된 인간에게 배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근대국가이다. 또한 그 자체가 외교의 주체이며, 그 상위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주권국가라는 개념이 성립한 것은 1648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조약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주권국가가 존재할 수 없었다. 또 문화적·언어적으로도 동질화된 국민들로 형성되는 국가, 즉 Nation state(국민국가)라는 개념이 발명되는 것은 절대왕정기의 프랑스이며, 프랑스혁명과 그 확대에 따라 국민국가라는 개념 역시 수출되었고, 20세기로 들어설 무렵에는 국민국가라는 개념이 널리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주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서서 구미와 동아시아 각국 상호 간의 조약체제가 성립한 뒤의 일이며,¹⁵⁾ 국민국가라는 개념 역시 그 뒤를 쫓듯이 수용되어 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일정한 규모의 인종적(ethnic)인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의 거주영역이 국민국가로 발전하여 국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통치자에 의하여 먼저 국경이 그어지고, 그 내부에서 다수와 인종집단의 언어·문화가 지배적인 언어·문화로 채택되며, 그것이 공교육과 행정의 회로를 통하여 정착하고 ‘국민’이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16~17세기 동아시아 세계와는 다른 정치권력의 형태에 대하여 이슬람지역사 연구자인 하네다 마사시(羽田正)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양 해역 세계에서는 다양한 상인집단의 무역활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내륙에 거점을 둔 강대한 정치권력은 반드시 해안 지역까지 이르지 않았다.¹⁶⁾ 더구나 “인도양 해역 연안과 동남아시아의 왕권은 영역보다 먼저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으며, 광역적인 정치권력은 자연·혈연·직업·인종·종교 등 다양한 요소를 제각기 만들면서 형성된 다양한 인간집단을 크게 포용하고 집단 간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통치했다고 한다. 강대한 제국 아래에는 지방·도시·길드·부족·종파 등의

15) 엄밀하게는 조선과 류큐에 대한 책봉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청일전쟁 이후일 것이다.

16) 羽田正, 2007 《東インド會社とアジアの海(興亡の世界史15)》(講談社) 39~40

정치적 주체가 다소의 독립성을 가지고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주권국가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지배였기 때문에 무굴제국 사람, 사파비제국 사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영역이 아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 이상, 인적인 의미에서의 ‘안’과 ‘바깥’의 구별은 없었다”.¹⁷⁾ 요컨대 영역을 정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동등한 臣民의 반열에 집어넣으며, 소속된 인종과 종파 등의 상위개념으로서 ○○인을 설정하여 통치하는 지배가 아니며, 또한 신민이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과 영역 밖에서 신민이 아닌 자가 들어오는 것을 모두 엄격하게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치권력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17세기 초의 동인도무역을 목적으로 인도양 해역으로 진출했던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동인도회사는 현지 정권에게 모종의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파격적으로 후한 대접(무역거점이 되는 상관과 요새의 건설허가 등)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왕권과 정치권력은 왕국에 풍부한 상품이 들어와서 교역이 활발해지고, 왕의 궁정이 관세 등으로 윤택해진다면, 무역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든, 어느 곳 출신이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하네다의 주장에 따르면, 다양한 인종과 종교·종파를 내부에 품고 통치한다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와는 상이한 ‘제국’, 즉 오스만제국 등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전근대국가로서는 오히려 그와 같은 지배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더욱이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양 해역과 동남아시아의 정치권력은 영역지배보다 인간집단의 지배를 중시했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것은 해상으로 열린 지역의 지배라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광대한 해상으로 열려 있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영역적인 지배가 불가능한 해상에 대하여 육상의 통치 권력이 어떤 지배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보다는 해상교역 등으로 바다 저편에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인간집단을 그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수용해서 보호하고, 재화의 거래에 대한 관세와 入港稅 등을 거둔다거나, 그들이 가져오는 재화를 내륙지역과 거래하여 이익을 올리는 방식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그들의 귀속의식은 인종과 종파에 기초를 둔 것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제국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복수의 원격지에 거점을 가져야 원

17) 羽田正, 《위 책》 356~357

18) 羽田正, 《위 책》 151

19) 단, 해상에 인접하여 성립한 정치권력이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중계무역으로 일어난 류큐가 17세기에 들어서 점차 중국무역의 이익이 감소하자 통치체제의 개편을 단행하면서 토지지배, 즉 영역지배로 통치의 중심을 옮겼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양 항해에 따른 해상교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단을 하나의 거점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처럼 바다로 열린 비영역 지배적 정치권력의 형태는 송·원 무렵까지는 그와 유사한 지배방식을 동아시아 해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연안 각지에 新羅坊을 건설하고 해상교역을 담당했던 장보고 등 신라인들의 활동이 가능해졌던 이유는, 첫째는 당시 중국의 통치 권력이 사람의 소속을 엄격하게 따지는 영역지배에 그다지 치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838년을 마지막으로 遣唐使가 중단된 이래 중국 왕조와는 정식으로 국교를 갖지 않은 일본 승려들이 중국을 왕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송·원 시대에 일본은 중국 황제의 책봉관계 속에 들어 있지는 않았지만, 승려와 상인과 상품의 왕래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은 중국 연안도시에 남아 있는 무슬림 상인들의 족적이다.²⁰⁾ 당나라 때는 무슬림 상인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廣州·泉州·福州·海南島 등지에는 아라비아어 페르시아어 碑文이 허다하게 남아 있다. 비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 9세기, 일부는 송대, 대부분이 원대의 비문이다. 또한 각지에는 清真寺라고 부르는 이슬람 건축양식의 사원도 건설되었고, 廣州·泉州·福州·海南島 등지에는 무슬림의 거주구역인 蕃坊과 그들을 통솔하는 蕃長이 존재했으며, 중국 정권 또한 이들을 용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나라 말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피난하였고, 이에 더하여 명 태조가 海禁을 시행하여 해상교역을 금지함으로써 해상교역이 경제기반이었던 그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원대에는 무슬림이 몽골에 버금가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던 탓에 漢族의 배척을 받았으며, 점차 한족과 통혼하거나 한족의 성을 쓰고, 마침내는 이슬람 신앙도 버리고 16세기 말에는 한족에게 동화되어 갔다고 한다. 요컨대 당대부터 내향하기 시작했던 무슬림 상인들은 중국 연안의 여러 도시에 거주구역을 마련했으며, 이런 일은 송·원대까지 계속되었지만 명대의 해금을 계기로 무슬림의 집단으로서의 소멸해 버렸던 것이다.

교역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현지 정권으로부터 교역 거점의 건설과 거주를 허락받는 상황은 계절풍을 이용하던 그 당시의 원양항해라는 기술적인 조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반드시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정권이 가진 대외관계에 대한 관리방식과 대외질서 의식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례를 한반도와

20) 중국의 무슬림에 대해서는 陳達生, 1993 <中國沿海地域のイスラム> 《アジアから考える2地域システム》(東京大學出版會)

일본열도에서 찾는다면, 고려시대에 송나라 상인들이 開城에 거주했던 것을 들 수 있고, 그들의 내항과 체류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있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몽고와의 관계에서 고려와 원 사이의 왕래는 해로·육로 모두 거의 자유로운 무역,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시대였다. 명이 성립한 이후에도 고려에서 육로로 중국에 왕래하는 사람의 흐름이 당장에 바뀐 것은 아니며, 사절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일반하여 상업 목적의 육로 왕래가 통제대상이 된 것은 이성계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의 일이다.²¹⁾

한일관계에서는 14세기 중엽부터 격화된 왜구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중앙정권은 충분한 통제방법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강온 양면책이 왜구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조선 전기에는 薺浦를 비롯하여 왜인들의 체재를 허락한 장소가 있었고, 한성에도 사절로서 상경을 허락받은 왜인과 여진인을 위한 체류시설이 존재했다. 왜인의 조선도항에는 조선정부가 허락한 자로 한정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도항 주체는 다양했으며, 일본열도의 중앙정권의 통제가 미치지는 못했다. 일본에서도 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시대에는 중국상인들이 하카타(博多) 거주를 허락받았으며, 16세기 중엽부터 일본으로 건너오기 시작했던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인들은 禁教와 이른바 ‘쇄국’이 실시되기까지는 사쓰마(薩摩)·나가사키(長崎)·히라도(平戸) 등 그들을 우대해 주는 영주의 항구에 기항했고, 영주 역시 무역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내항을 환영했으며, 나중에는 영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예로 들어도 좋을 것이다. ‘쇄국’ 후에도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인과 중국인 거주지역이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왜구대책으로 거류가 허락된 三浦의 왜인들은 조선쪽의 감시와 행동의 제한이 있었고, 임진왜란 후 다시 새롭게 인정된 초량왜관에서조차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쇄국’ 이후의 네덜란드인이 데지마(出島)에 격리된 일은 유명한데, 당초에는 나가사키에서는 일본인 가정에 체류하는 것이 허락되던 중국인도 중국에서 일본으로 도항하는 것이 반대로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액과 도항 선적 수에 상한이 설정된 이후부터 밀무역 방지를 목적으로 1685년 이후에는 도진마치(唐人町)로 거주가 제한되었다.

요컨대 크게 보자면 중국에서는 명대에,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에 각 정권이 자신의 통치영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함과 아울러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행동의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21) 須川英徳, 1997.3 <高麗後期における商業政策の性格> 《朝鮮文化研究》 4

점이다. ‘17~18세기의 한일관계’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명에서 시작하여 조선, 일본의 순서로 채택했던 海禁 또는 왜국이라는 3국에 공통된 입출국에 대한 관리·통제정책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앙권력의 출현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먼저 동아시아에 있어서 왜 그와 같이 국가에 의한 사람의 출입을 관리·통제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기에 따른 변화를 생각할 때, 명은 16세기 말엽에는 해금을 해제하였고, 명청 교대 뒤의 청 또한 南明 정권과 타이완에 근거지를 둔 정씨에 대한 대항 때문에 ‘遷海令’을 내려 해역과의 차단을 단행했지만, 17세기 말 정씨가 항복한 뒤에는 이 금지를 풀었으며, 명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본에 대한 직접 도항까지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해외도항과 외국선 내항에 대하여 중앙정권이 통제를 가했던 것은 15세기에서 16세기 중반까지 遣明船의 경우와 히데요시 정권 이후의 해외도항선(朱印船)이며, 거꾸로 외국에서 내항해 온 경우에 대하여 내항·체재지 지정과 船籍數 지정 등을 시작한 것은 에도시대에 들어서의 일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체계적인 법령이 발포된 것이 아니라 禁教를 축으로 하여 서서히 통제가 가해졌으며, 그 결과의 누적이 18세기 말엽에는 ‘祖法’으로 의식화되었던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이와 같은 사정을 보는 한, 각 정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도항과 내항에 대한 제한의 강약이나 제한 대상도 역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고려 말에 처음에는 해로를 이용하던 명에 대한 조공이 육로로 지정된 이래 해로를 이용한 대중국 통교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으며, 육로를 이용한 통교도 조공사절이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명청 교체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도 15세기에는 쓰시마뿐만 아니라 교토에도 사절이 파견되었지만 이후는 쓰시마까지였다. 에도시대에는 빈번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중심지까지 사절을 파견했지만 민간인에 의한 일본 지역과의 교역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며, 쓰시마에서 초량왜관으로 반입된 상품이 공무역 내지는 사무역으로 거래되었다. 거꾸로 일본에서 보낸 사절은 전기에는 ‘일본국왕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절이 한성까지 상경했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쓰시마에서 부산까지였다. 또 에도 막부의 장군이 국서를 보내도 그것을 전달하는 ‘일본국왕사’는 조선에 보내지 않는 관계이며, 비대칭적인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의 경우 일본·중국 어느 쪽과도 다르게 공식사절이 일본으로 가는 것 이

외의 해외도항은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으며, 또한 내항이 인정되었던 경우는 류큐와 일본에서 오는 사절뿐이었다. 또 육로의 경우 전기에는 여진과 중국, 후기에는 중국과 통교할 뿐이었으며, 타 지역과의 통교관계는 같은 시기의 일본과 중국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한·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질서라는 틀이 먼저 있고, 이 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각의 중앙권력과 지방사회의 이해와 예측이 교차하는 속에서 상대국의 요구가 자국에게 국내적으로나 대외관계상 좋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타협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논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든지 무시하는 국제·국내관계 속에서 구축되고, 명시적 또는 암묵 중에 상호 이해된 관계가 거듭 축적된 결과이다. 여기서 한 나라의 역사와 지역사 내지 글로벌 히스토리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외교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외교서한과 의례에 대하여 쌍방의 호칭이나 문서의 형식이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럴 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禮制였다. 후마 스스무(夫馬進)은 명청과 조선 간에 발생했던 외교사안 4건을 사례로 외교에 있어서 ‘禮’와, 그것을 위배한 벌로서의 ‘問罪’의 관계를 논하고, ‘禮’의 질서이기도 한 화이질서의 실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외교에 있어서 ‘禮’와 ‘問罪’ 사이에는 국내법인 律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명확한 위반사례와 여기에 대응하는 벌칙규정이 없으며, 무엇이 禮에 어긋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국 측의 자의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즉 조선)이 ‘수치스런’ 마음에서 스스로 이를 깨달아야 하며, 또한 ‘책봉’을 외교카드로 이용함으로써 원래는 전혀 별개인 문제를 ‘禮’와 관계있는 것으로 바꿔치기하여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明清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외교야말로 禮에 의한 통제가 가장 성공했던 사례’이며, 동일한 조공국, 책봉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해서조차 禮에 의한 통제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하고, 조선에 대해서만 기능했던 이유를 “조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禮의 내면화를 추진했고”, “明朝의 책봉 아래 있으면서, 이로써 명이 주도하는 禮에 의한 세계질서의 형성에 스스로 참가할 수 있다는 기쁨을 음미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明朝가 주변의 책봉국, 그 중에서도 조선에 대한 외교에서 사용된 ‘禮’는 그것이 ‘問罪’와 不即不離하게 기능함으로써 ‘복종’의 自發性을 훌륭하게 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논했다.²²⁾ 이와는 반대로, 中華를 중심으로 하는 禮에 의한 세계질서를 인

정하지 않는 17~18세기의 일본에 대해서는 책봉이나 禮를 외교카드로 쓸 수 없었고, 상호의 實利에 기초하는 관계가 진행되었던 것이며, 에도막부와 조선왕조의 관계 역시 禮는 외교의례의 격식이라는 차원을 넘지 않았다.

V.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原像

통치영역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관리하려는 정책은 명대의 중국에 기본 형태가 존재한다. 주지하다시피 명초의 중국은 엄격한 해금정책을 시행했다. 즉 일반 인민의 자의적인 해외도항을 엄금하고, 동시에 해외로부터 외교사절 이외의 내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자격도 제한하여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현지 首長の 조공사절만을 원했다. 원래는 별도로 존재했던 ‘海禁’과 ‘冊封·朝貢’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어째서 명초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에다 마코토(上田信)는 ‘명 왕조의 그랜드디자인’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³⁾ 명 이전의 元은 은을 축으로 하여 유라시아 전역을 포섭하는 교역 매카니즘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에 필요한 은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위구르 상인과 무슬림 상인들은 물자의 유통과 은의 순환속도 향상을 꾀하고, 원은 은과 연결된 鈔의 발행으로 은 부족을 보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은의 절대량의 부족에 더하여 기후의 한랭화가 발생하여 교역 매카니즘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 더군다나 張士誠 일행의 반란세력이 연해지역과 대운하 유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장강 하류 유역에서 북부지역으로 곡물을 수송하는 경제 동맥이 정지되고 원의 지배는 사실상 화북지역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마침내 내륙에서 흥기한 반란세력의 하나인 朱元璋이 張士誠을 비롯한 다른 할거세력을 물리치고, 이미 중국지배의 의욕을 상실한 원 조정이 大都를 포기함으로써 大都마저 주원장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그리고 우에다의 말에 따르면, 원 말의 정치경제 과정을 경험했던 주원장이 만들려고 했던 제국은 “화폐경제 메커니즘의 부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된”²⁴⁾ 것이라고 한다.

22) 夫馬進 <明清中國の對朝鮮外交における‘禮’と‘問罪’> 夫馬進 編, 2007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 347~348

23) 上田信, 2005 《海と帝國 明清時代(中國の歴史09)》(講談社) 66~73, 90~91

즉 국내적으로는 교역에서 은을 사용하지 않고 인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물과 노동력을 징발하며, 대외적으로는 지배영역의 외부로부터 화폐경제가 제국을 침식하는 것을 우려하여 외국과의 교역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제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1371년에 개시되는 海禁이며, 方國珍의 잔당과 蘭秀山의 난 등 원말명초의 반란세력에 가담했던 자들, 즉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해운에 종사하던 자들을 군에 귀속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일체 금지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 민간교역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던 물자의 조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주변 여러 지역에 조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예를 들면 베트남 남부의 占城(참파), 타이의 아유타이 왕국 등은 고려, 陳朝 베트남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국내사정에 따라 조공하는 것이 정권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2년 1공, 3년 1공 등의 무역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했던 것이다.²⁵⁾ 그 결과 그때까지 널리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해역에서 항구 도시 국가에 거점을 두고 무국적으로 중계무역에 종사하고 있던 무슬림 상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바다에 면해 있으면서도 그 배후지인 내륙마저도 영역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조직했던 조공사절단에 참가하지 않는 한 대명 교역에서 소외되어 간다. 게다가 이미 보았듯이,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무슬림 상인들도 명의 해금정책을 계기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해역에서 분리되어 어쩔 수 없이 철수하고 점차 동화·흡수되어 간다. 이것은 15세기의 류큐가 동남아시아와 중국대륙·일본열도·한반도의 중계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의 海禁도 16세기로 들어설 무렵에는 福建과 廣東의 중국 밀무역상인들이 禁制를 어기고 동남아시아로 도향함으로써 뿌리부터 무너져 간다. 1513년에는 포르투갈인이 중국에 처음으로 내항하여 동남아시아·중국의 밀무역에 참가하였다. 이 동남아시아·중국을 연결하는 밀무역의 성행에 더하여 1530년대부터는 일본의 은 산출이 급증하였고, 그 은은 조선을 경유하여²⁶⁾ 다시 일본·중국의 밀무역을 통해서도 수출되고, 포르

24) 上田信, 《앞 책》 91

25) 上田信, 《앞 책》 103~105

26) 中宗 38년(1543)에 완성, 시행된 《大典後續錄》 刑典, 禁制에는 赴京人, 즉 北京으로 가는 사절단의 수행원이 은·철 등을 몰래 반입하거나 사적으로 짐을 위탁하고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倭銀의 매입, 倭人과의 밀무역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중국으로부터는 고급 견직물·약재 등이 수입된 모양인데, 端川에서 산출하는 은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대량으로 들어 오게 된 倭銀 또한 대중국 무역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함경도 端川의

투갈인 역시 일본·중국무역에 점점 참여해 간다. 1543년 일본에 와서 鐵砲를 전해 주었던 포르투갈인 두 명이 중국 밀무역상 두목인 王直²⁷⁾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도 최근에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명의 해금정책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은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동아시아 해역의 교역을 급속히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밀무역을 급격히 팽창시켰다. 한편, 일본의 10년 1공을 허락했던 명에 대한 조공사절은 1547~1549년에 파견된 策彦周良 일행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으며, 조선과의 교역은 大內氏처럼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쓰시마가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일방통행 적으로 교역사절을 파견하는 형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면포 등을 구입하려고 대량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倭銀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그 대책에 고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왜인들에게 지급되는 쌀·콩·목면 등은 상품으로서 집하된 것이 아니라 稅貢으로 징수된 품목이며, 왜인들의 요구가 증대했다고 해서 손쉽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16세기 중반의 일본은 수출상품이 되는 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출창구와 수단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와 같이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중국인 밀무역상 집단에 가담했고, 이를 단속하려는 명의 관헌과 투쟁했으며, 주로 중국 연안을, 일부는 조선 연안을 습격하기도 했던 것이 후기왜구이다. 또한 급속하게 상품경제가 성장하고, 재정에 있어서 은의 사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던 명에게도 은은 어차피 필요한 물자이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면서도 껍질만 남은 海禁의 벽이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 후기왜구에 대하여 명은 무력에 의한 진압뿐만 아니라, 1567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각지로의 중국선 도항 및 교역금지를 해제하고, 동남아시아 선박이 福建의 漳州로 입항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조공과 이에 수반하는 공사무역 만이 무역수단이었던 지금까지의 해금정책을 크게 바꾸는 것이었다. 책봉·조공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교역을 互市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일본과 중국의 직접교역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일본선박과 중국선박이 교역하는 것까지도 금지할 수는 없었으며, 일본

銀은 燕山君 때 발견되어 채굴이 개시된 듯하며(《燕山君日記》 燕山君 10년 윤4월 을축조, 1504년), 中宗 3년(1508)에는 ‘端川郡多產銀, 郡民竊取, 轉賣通事, 通事以此多賚赴京’ (《中宗實錄》 中宗 3년 11월 경자조)이라고 하여 사절단의 역관들이 銀을 반출하여 중국산 물품 구입에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

27) 王直은 이미 포르투갈인의 표착에 앞서 1541년에 히라도에 내항했고, 領主人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의 환영을 받으며 거점을 마련했다. 上田, 《앞 책》 249~250

으로 가는 직접 도항도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또한 1557년부터 마카오 거주를 허락받은 포르투갈인들은 일본산 은과 중국 생사의 교역을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았다.

17~18세기의 한일관계를 생각하는 한편, 그 전제가 되는 16세기 후반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중국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책봉관계 질서가 존재하고, 그 외교관계에 기초하여 사절 왕래에 수반하는 교역이 존재하였다. 한일관계는 국왕 상호 간의 통신이라는 관계만이 아니라, 상호의 교린이라는 틀 안에서 마치 황제가 국왕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공과 교역을 허가하는 것처럼 쓰시마를 비롯하여 서일본 각지에서 조선으로 파견하는 사절과 교역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조공이라는 외교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민간교역 역시 일본·중국·동남아시아 해역을 연결하며 16세기 후반에 출현했던 것이다. 이 루트는 胡椒 등의 향신료와 蘇木 등의 염료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산 상품, 생사와 견직물, 도자기 등 중국산 상품, 아울러서 일본산 은이라는 각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해상교역 루트였기 때문에, 바다로의 진출이 엄금되었고 더욱이 육상교통 만으로 중국과 연결되어 있던 한반도를 당장에 끌어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산 은의 증산 이전인 16세기 초 이미 端川에서 은광이 발견되었던 조선에서는 중국산 견직물을 비롯한 사치품과 약품 수입의 대가인 은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여기에 1530년대부터는 대마도를 경유하여 새롭게 일본산 은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²⁸⁾ 요컨대 중국인·일본인 밀무역상에 의한 해상루트와 병행하여, 한반도를 거쳐서 한중일을 연결하는 육상루트 역시 조금 앞서서 열려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해상루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후기왜구의 습격에 시달리기도 했으므로 전혀 무관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중국무역 루트가 해상루트와 쓰시마·한반도를 경유하는 육상루트의 2개가 형성되었던 셈이 된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기본방침은 이처럼 비등해 가는 동아시아 해역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굳이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원에게 복속된 이래 밖으로부터의, 그리고 위로부터의 상업화에 노출되었고, 대토지를 지배하며 대외교역에 참가할 수 있는 한 줌의 사람들에게는 유리해도, 그 부담이 대다수의 생산자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사태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세웠던 신왕조가 조선왕조였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명 왕조의 그랜드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부정하고, ‘利權在上’이라는 개념이 상징하는 바의 현물과 노동력 징수로 신왕조의 재정·경제시스템이 구축²⁹⁾되어 있었던

28) 조선에서의 은 산출에 관해서는 주 25 참조.

29) 須川英徳, 1999.3 <朝鮮初期の經濟構想> 《東洋史研究》 58-4

것이다. 상업적인 부에 대하여도 근본인 농업을 버리는 것으로 보고 부정적인 감각이 침투해 있었다. 물론 상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1470년대에 남부에 출현하기 시작한 지방시장을 둘러싸고, 상업은 무턱대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백성이 有無相通하는 방도로서 근본인 농업을 돕는 행위로 보는 견해(‘以末補本’論)도 16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출현했다.³⁰⁾ 그러나 대외교역에서는 왕실과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급 사치품과 약재 등의 물자는 중국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통해서 입수하고, 왜인이 원하는 쌀·콩·목면 등의 물자는 조세와 공물로 징수한 것을 국가에서 왜인에게 지급하는 조선왕조의 대외교역의 기본 시스템까지 변화했던 것은 아니었다.

Ⅵ. 17세기 일본을 둘러싼 대외관계 재편 속에서의 한일관계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지만 그것은 전투가 끝났을 뿐이며, 일본과 조선, 명 사이에 즉시 평화가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조선, 명 사이의 평화회복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한 신정권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갓 출발한 도쿠가와 정권이 대외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기본방침을 가졌는지 보기로 하자.

도쿠가와이의 기본방침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과 유럽인의 내항에 대하여 이를 환영하고 확대하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에 이어서 새로 입항한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도 역시 내항과 교역을 허락하였다. 기독교(카톨릭)에 대하여 히데요시는 1587년에 선교사 추방을 명했지만, 중국산 생사·견직물 등을 가지고 들어와 있던 포르투갈인과의 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완화하였고, 교회당 재건, 포교 목인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었다. 에도막부도 그런 방침을 계승했지만, 기독교 금지 방침을 드러낸 것은 1612년부터이다.³¹⁾ 그러나 외국선박의 내항과 일본인의 해외도항, 그리고 도항한 일본인의 해외거주와 귀국이 허락되는 상황에서는 마닐라를 거점으로 하는 선교사의 입국과 포교를 위한 서적류의 반입도 용이했으며, 완전한 禁教는 어려웠다. 일본인의 해외도항에

30) 박평식, 1999 《조선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제5장

31) 1612년에 교토의 교회당을 파괴하고, 1614년에는 저명한 일본인 신자와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것은 예수회였는데, 추방 이후의 잠입 선교사는 에스파냐의 지원으로 마닐라에 거점을 갖고 있던 프란시스코회였다. 森克己·沼田次郎 편, 1978 《對外關係史(体系日本史叢書5)》 (山川出版社) 135~139

대해서도 히데요시 정권과 마찬가지로 朱印狀에 의한 허가제를 계속하였다.

이 가운데 1614년 히라도에 동인도회사 상관을 열었던 영국인은 중국과 직접무역에 참가할 수 없었고, 일본에서 무엇보다 수요가 컸던 중국산 생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며, 거래를 확대하지 못한 채 1623년에 일본을 떠났다. 마닐라에 거점을 둔 에스파냐인은 대일무역에 열중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朱印船이 마닐라에서 중국선박이 가져오는 생사를 사 모으기 위하여, 멕시코 무역에 방해가 되고, 더욱이 선교사 잠입의 근거지이기도 했으므로 1624년 필리핀 총독이 파견했던 사절이 접수를 거절당하고 국교는 단절되었다.³²⁾

이에 비하여 네덜란드인은 1600년에 처음 도착했지만, 그것이 즉시 지속적인 무역의 개시를 의미한 것은 아니며, 1609년 히라도에 상관을 개설하고부터 지속적인 무역이 개시된다. 네덜란드인은 몰루카 등 동남아시아산 향신료와 인도산 면포의 교역에 추가하여 1624년에는 타이완에 근거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산 생사·견직물과 일본산 은·구리 무역을 조직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물품의 중계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³³⁾ 요컨대 이미 본 바와 같이 16세기 중반부터 주요 거래상품인 중국산 생사³⁴⁾·견직물, 일본산 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게다가 인도산 면포 등 아시아 각지의 상품을 상대국의 수요에 부응하여 산지국에서 확보하고, 그것을 중계무역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 여전히 중국으로의 직접 도항이 인정되지 않았던 일본의 朱印船이 베트남, 타이,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거래했던 것도 그와 같은 상품이었으며, 일본 선박이 도항하는 동남아시아 각지에는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일본인 마을(日本町)이 들어섰다. 그러나 해외로 도항했던 것은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선원뿐만 아니라, 전란의 종결과 함께 일터와 갈 곳을 잃어버린 병사 출신들도 많았으며, 柬埔寨(감보디아), 마닐라 등지에서 오는 외교문서에는 일본인의 난폭과 소동을 호소하는 것도 있다.

수입생사에 대해서는 1604년부터 포르투갈 선박이 들여온 중국산 생사에 대하여 교토·나가사키·사카이(堺)의 유력상인들에게 구입단체를 결성토록 하고, 그 대표(이토와푸 도시요리 ; 糸割符年寄)와 포르투갈인 사이에 구입가격을 교섭시켜서 가격의 일원화를

32) 森克己·沼田次郎 편, 《앞 책》 138

33) 森克己·沼田次郎 편, 《앞 책》 142~144

34) 네덜란드인은 중국과의 직접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타이완에서 입수한 중국산 생사를 일본으로 들여왔지만, 데지마로 옮긴 무렵부터는 베트남산, 땡갈산 生絲를 일본으로 들여왔다. 또 18세기에는 생사가 제1위의 상품이 아니었으며, 그 대신 인도산 목면과 비단 등의 직물 무역, 자바산 사탕이 중요한 상품이 되었다. 森克己·沼田次郎 편, 《앞 책》 162~163

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 가격에 납득할 수 없으면 재고를 남기는 것도 가능했지만, 구입하는 쪽이 조직되어 있었으므로 결국은 이 가격에 매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구입가격의 인하와 그때까지 공인되어 있던 예수회 선교사의 무역 개입을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 구입 방식은 중국산 견직물과 縫糸, 비중국산 생사,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이 가져오는 생사, 견직물에도 확대되어 간다.³⁵⁾

어찌됐든 동남아시아와의 교역과 유럽 선박의 내항에 관해서는 통교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기독교의 유입과 세력 확대가 점차로 문제시 된다는 점, 수입품 중 중요 품목인 생사의 수입가격 상승 방지대책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두 가지를 지적해 둔다.

그러나 조선 및 명과의 관계 회복은 평탄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가 일본 쪽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³⁶⁾

도쿠가와씨는 1599년 五大老의 筆頭로서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에게 조선과의 강화교섭을 명했는데, 그때 도쿠가와씨는 강화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재출병도 불사한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피로인 송환에는 협력하지만 이에야스 쪽에서 먼저 국서를 보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상은 참패였지만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서 아라노는 “그들 군사정권의 담당자에게 있어서는 武威야말로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본이며, 전쟁에서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지배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³⁷⁾이라고 설명한다.

조선과의 평화회복 교섭과 그 교섭의 이면에서 쓰시마가 행했던 이에야스의 국서위조와 그것과 짝을 맞추기 위한 국서개찬 등에 관해서는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의 뛰어난 연구³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쓰시마에게 있어서 무역의 재개는 사활 문제이며, 더욱이 조선쪽에도 급속하게 힘을 뻗어 왔던 만주족에 대한 경계심과, 일본이 끌고 간 피로인의 조기 귀국 등의 사정 때문에, 이에야스의 국서와 犯陵賊의 진위 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1607년 일본에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고 국교를 회복시켰다. 쓰시마에 대하여도 1609년에 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쓰시마에서 파견하는 사절

35) 森克己·沼田次郎 편, 《앞 책》 133~135

36) 荒野泰典, 1988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제1장 大君外交体制の成立. 본 장은 1981 《講座日本近世史》 2 (有斐閣)에서 처음 출판된 것.

37) 森克己·沼田次郎 편, 《앞 책》 175

38)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國書》(中公新書)

선박에 관한 규정을 전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명과의 통교를 목적으로 ‘假道路, 修貢大明’하겠다는 희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에야스는 조선을 통해서, 아니면 류큐를 통해서 국교회복과 무역재개의 방도를 구했지만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야스의 허가를 얻어서 감행된 시마즈(島津氏)의 류큐 정복(1609)이 일단락된 1610년 말에 측근인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에게 명하여 명의 복건 총독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중국상인 周性如에게 위탁하여 보내게 하고, 일본에서 명으로 무역선을 파견하는 허가증인 勘合符의 발행을 원했다. 이미 1608년에는 ‘唐船’이 시마즈령에 기항하고 있었으며, 1910년에는 일본에 왔던 명나라 사람이 이에야스의 알현을 허락받은 일도 있었다. 외교상으로는 일본과 명 사이에 정식으로 평화회복 절차가 취해진 것이 아니었으며, 명에서 일본으로의 도항금지가 해제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테면 점진적인 해결책으로 명 선박이 일본에 내항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명과의 직접무역 재개를 희망하는 서신이 이에야스의 지시로 발송되었던 것이다. 복건 총독 앞으로 보낸 이 서신에 대한 명의 회답은 없으며, 중국 측에는 이 서한이 남아 있지 않다.³⁹⁾ 그러나 중국선박의 내항이 점차로 증가하여 네덜란드인의 기록에 의하면 1631년에는 70~80척이었다고 한다.⁴⁰⁾ 1610년에는 중국선박의 내항이 나가사키로 제한되었지만, 1616년에는 사쓰마 기항도 다시 허가되었다.⁴¹⁾ 그러나 1635년에는 역시 나가사키로 입항이 제한되었고, 이후 이것이 계속된다. 이에야스는 명과의 직접무역 재개를 희망했지만, 결국 명과 국교를 갖지 않고 내항한 중국선박과의 무역만 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명과의 국교회복과 무역재개의 단념에 관하여, 로널드 토비는 “2대 장군 히데타다(秀忠)가 명 중심의 국제 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은 막부의 정당화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명과의 국교회복·감함무역을, 명으로부터의 타진을 각하시키면서까지 단념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대명외교는 대조선외교에서 야나가와 사건이 해결된 뒤에 장군의 외교상 호칭을 ‘日本國大君’으로 정하고, 대조선 외교문서에 일본 연호를 명기하는 것으

39) Ronard. P. Toby, 2008 《‘鎖國’という外交(日本の歴史9)》(小學館) 45~46

40) 山脇悌二郎, 1964 《長崎の唐人貿易》(吉川弘文館) 8~9

41) 사쓰마로의 來航은 중국상인의 출항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복건·타이완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 출항한 경우는 오키나와 제도를 따라 항해하여 규슈(九州) 남부에 도착하고, 寧波 등 중부지역에서 출항한 경우는 대양을 횡단하여 규슈 북부로 직행했음이 예상된다. 중세의 중일 통교에 관한 연구이지만, 橋本雄, 2007 <中世の國際交易と博多>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의 南島路와 大洋路의 구분 사용을 고찰하고 있으며, 참고가 된다.

로 “동아시아의 국제공간을 형성해 갔던 중국형 세계질서로부터의 이탈을 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형 화이의식’이 ‘대군외교’의 기본 구상이었다고 한다.⁴²⁾

로널드 토비만이 아니라, 1635년부터 대조선 외교문서에서 일본 연호를 사용한 것과 ‘대군’ 칭호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의 이탈과 네덜란드·류큐·조선을 일본의 하위에 두는 일본형 화이의식의 성립을 아울러서 논의하는 것이지만,⁴³⁾ 이에 대하여 이케우치 빈(池内敏)은 17세기 전반기에 왕래했던 安南國, 暹羅國(시암), 柬埔寨(캄보디아)와의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干支와 나란히 베트남과 타이의 독자적인 연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국왕’ 칭호를 포함하여 다양한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국왕’ 칭호로 행하는 외교가 適禮라고 하는 관념보다도 민족적 자각(중국으로부터의 자립의식)을 간직한 여러 민족이 각기 스스로의 호칭과 연호·國字를 쓰면서 행하는 통교를 적례로 하는 관념을 읽을 수 있다”⁴⁴⁾고 평했다. 더욱이 1715년부터 시행된 正德新令에 따라 중국인 상인에게 내항 허가증으로 발급하게 된 信牌에 일본 연호가 적혀 있는 점⁴⁵⁾이 청조에서 문제가 되고, 그 전말을 중국상인이 일본 측에 전한 기록에, 중국 측의 논의로서 외국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외국을 따르는 것이라는 당시의 상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는 각기 다른 연호가 있는 법이므로 외국에서 보내는 문서에 그 나라 연호가 있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해서 마쓰우라 아키라(松浦章)가 검토한 청조 측의 사료는 약간 다른 사정을 전하고 있다. 청조에서는 信牌의 수수를 둘러싸고 관청에 대하여 소송이 발생하고, 浙江海關에 실패를 보관해 버렸으며, 중국의 승인이 나가사키에서 무역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고, 그 때문에 鑄錢 재료인 구리의 수입이 정지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것이 일본 연호가 적힌 信牌의 수수를 둘러싼 무역단절에 기인한다는 것은 명백하며, 관료들의 논의에서는 연호 문제에 추가하여 중국 측에서 발행한 도항허가서 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강희제의 판단은 실패에 적힌

42) Ronard. P. Toby, 《앞 책》 104~105

43) 藤井讓治, 1994 <一七世紀の日本> 《岩波講座日本通史12》(岩波書店)

44)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學出版會) 62~67

45) 이 시기의 외교는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관례가 여러 가지로 변경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과의 국서에 사용하는 將軍이란 칭호를 日本國王으로, 류큐 國司를 中山王으로 고쳤다. 무엇보다도 將軍에게 쓰던 천황과 동격이란 문자를 천황보다 낮추고 三公諸王보다 위로 정하는 등 개정했으나, 8대 장군 요시무네(吉宗)가 원래대로 되돌렸다. 紙屋敦之, 1997 《大君外交と東アジア》(吉川弘文館) 제1부 제2장, 48~50

일본 연호는 상인이 사용하는 부호 같은 것이므로 문제시할 필요가 없고, 중국 측의 허가서라고 해도 예부가 발행하는 것과 같은 외교문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문제 삼으면 상인들은 무역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었다.⁴⁶⁾ 즉 일본 연호에 대하여 그것을 연호로 간주하지 않고 상인이 사용하는 기호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중화질서에는 저촉되지 않도록 문제를 회피시켰던 것이다.

아울러서 이케우치는 “명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붕괴하고, 청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기까지의 사이에 동아시아 세계에는 다양한 변동이 계속되었고, 주변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동 속에서 자신을 새로운 세계의 어느 곳에 다시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 모색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종전의 관행인 ‘국왕’ 상호 간의 외교야말로 敵禮로 보는 견해 외에, 민족적 자각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외교칭호·연호·國字를 사용하면서 적례외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왕’이란 글자는 일개 지방권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피되었다”⁴⁷⁾고 결론지었다. ‘大君’ 칭호의 채택과 일본 연호의 사용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외교자세의 표현이지만, 외교 브레인이었던 禪僧들이 公家外交 이래의 대중국 대등의식과 중국황제를 중심으로 주변 국왕의 위치를 정하는 국제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무로마치 시대에 조선으로 보내는 국서에 과감히 ‘왕’ 자를 적지 않고 ‘일본국 源某’라고 쓴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거꾸로 조선에서 보낸 국서에는 ‘일본국왕전하’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시기의 ‘大君’ 칭호 채용을 가지고 조선을 하위에 두는 의식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문서에서의 용법·서식상 ‘대군’이 조선 측보다 우위라고 할 만한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곤란하며, 대등한 위치에서의 관계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평했다. 더욱이 ‘대군’ 칭호는 ‘大樹源君’의 약칭으로서, 막부의 로주(老中)들이 고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대군’ 칭호에 의한 외교는 주종제에 뿌리를 둔 武家外交의 색채를 띤 것이라고 했다. 이케우치의 ‘민족적 자각’이라는 표현에는 의문이 있지만, 일본·한국·중국, 그리고 불교상의 天竺이라는 전통적 세계상과는 다른, 각양각색의 국가, 다양한 인종과 언어·문화의 존재를 외교의 장에서 체감해 갔던 막부 당국자들에게 예전의 명이 요구했을 만한 화이질서를 전제로 하는 책봉관계와 외교관계는 크게 상대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⁴⁸⁾

46) 松浦章, 2007 《江戸時代唐船による日中文化交流》(思文閣) 111~117

47) 松浦章, 《위 책》 71

48) 상술한 것처럼 대외관계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1615년에 막부가 정한 ‘禁中並公家諸法度’를 계기로 무가정권의 수장으로서 명백히 책봉된 일본국왕과 전통적인 일본국왕=천황이라

칭호를 둘러싼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싶다. 의식 속에서 일본의 외교 당사자에게 조선을 낮게 보는 감각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거꾸로 조선 측 당사자에게도 일본을 깔보는 의식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실제의 외교나 서식에서는 막부장군과 조선국왕을 대등하게, 국서교환을 포함하여 양국이 대등한 외교를 행하고 있었다는 점, 또 한편에서 외교 형식 상으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중국과의 사이에는 책봉을 비롯하여 국서교환을 포함한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과 이를 전제로 한 일본의 무역선 파견은 결국 포기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선박 내항에 의한 무역뿐인 관계가 선택된 점을 확인했다면 충분할 것이다. 또 그와 같은 일본의 대응에 대하여, 중국 측 역시 信牌에 일본 연호를 기입한 문제를 둘러싼 대응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일무역의 필요성과의 관계에서 굳이 문제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VII. 17~18세기 동아시아에서의 朝日무역

중국에 일본의 무역선 파견이 불가능했던 점, 그리고 기독교 금지를 보다 철저하게 할 목적에서⁴⁹⁾ 1635년에 일본인의 해외도항과 귀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더욱이 1639년에 포르투갈선의 내항을 금지한 이후 일본의 해외무역은 중국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1641년에 네덜란드 상관을 히라도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로 이전), 그리고 쓰시마의 대조선무역으로 거의 제한되었다. 여기에서 거의라는 것은 류큐를 경유하는 대중국 무역과 아이누와의 교역이 있기 때문이지만, 논의의 편의상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의 대외무역 창구의 제한은 17세기 쓰시마의 조선무역의 성격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것은 중세의 조일무역에서는 쓰시마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료와 새로운 옷감인 목면수입이 주축이었지만, 근세무역에서는 생사와 은 무역이 주축이 되고, 그것이 쓰시마의 대조선무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는 두 개의 계보가 일체화되어, 천황과 장군을 함께 의미하는 일본국왕으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紙屋敦之, 《大君外交と東アジア》 제1부 제2장. ‘大君’ 칭호의 채택과 함께 琉球國 中山王은 시마즈씨에 의하여 왕보다 격하된 칭호인 ‘琉球國司’에 임명되었다.

49) 山本博文, 1995 《鎖國と海禁の時代》(校倉書房)에서는 무역통제라는 이유를 명확히 부정하고,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 진압에 이은 포르투갈인 추방(1639년), 무역재개를 희망하는 사신의 처형(1640年)과 그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상한 외국인 경비체제와 海防을 위한 國繪圖 작성 등을 일련의 ‘鎖國’을 향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同書, I ‘鎖國令’이란 무엇인가).

쓰시마·조선무역⁵⁰⁾은 15세기 이래 의례적인 물품 증답인 ‘進上, 回賜’, 그리고 公營의 무역인 ‘公貿易’, 특징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영의 ‘私貿易’으로 나뉘며 근세에도 마찬가지였다. 쓰시마의 進上은 후추, 명반, 단목 등 동남아시아산 물품이 포함되었고, 15세기에는 동남아시아산 물품이 80~90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러한 물품은 류큐를 경유, 나중에는 나가사키 경유로 입수된 상품이다. 그 외에 17세기 초의 물품에는 철이나 금속을 이용한 상자, 거울, 병풍 등 일본산 공예품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선의 回賜는 인삼, 호피, 虎肉, 개, 명주, 모시, 마, 밤, 대추 등 동식물에서부터 식물, 일용품에 이르기까지 多種多用인 동시에 모두 조선 국내에서 조달된 것이었고 변화하지 않았다. 공무역에서는 구리, 주석, 단목, 水牛角 등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는 국가기관의 필수품을 公木(木棉)을 대가로 하여 공정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며, 그 후 일본의 상품이 구리와 은으로 대체되거나 公木이 쌀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무역에 비하여 사무역에는 정품·정액제가 없고, 가격이나 분량은 한 달에 6번 개최되는 開市에서, 참가를 허가받은 자들에 의해 부산의 왜관에서 행해진 교역이다. 17세기 초에 어떤 상품이 거래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단편적인 기록에서 각종 직물이 거래된 것 같지만, 조선 측의 기록에서는 京商으로 하여금 靑布, 絲, 紬, 氈 등을 왜관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의견, 혹은 京商이 동래에 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관청이 가지고 있는 중국산 물품을 모두 동래로 보내야 한다는 지시 등이 있으며, 사무역 거래에서도 일본 측은 중국산 생사, 견직물 등을 요구했던 것 같다.⁵¹⁾ 그러나 17세기 전반에는

50) 쓰시마·조선무역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에 의함.

51) 중국산 생사·견직물을 조선 측이 어떻게 입수했을까? 기본적으로는 淸으로 가는 정기 사행에 수행원으로 상인들이 따라가며, 그들이 입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東萊의 倭銀이 北京으로 흘러들어갔는지, 현시점에서는 추적할 수 없다. 요컨대 대마도가 생사를 입수할 수 있었던 한국 내의 루트가 해명되지 않은 것이다.

銀의 유통은 동래상인의 사무역에 따른 것이었는데, 사무역이라고 해도 사인이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래상인의 실패는 동래부 역관과 군교, 邑吏들이며, 관료조직의 말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상품의 조달과정에서 한성의 貢人契 및 市塵과 연결을 갖고 있었으며, 유입된 倭銀이 직접 시중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절반은 관청의 공적인 구매자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일부가 물자조달 등으로 시중에 방출되며, 17세기 후반에는 그 방출 부분이 秤量貨幣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國用 綿紬를 납입하고 있던 綿紬塵은 중국에서 생사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해서 견직물을 직조하고, 이것을 중국에 보내는 進獻用 方物로서 濟用監에 납입하는 일을 18세기 말까지 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万機要覽》 財用編 5, 方物各種措備, 綿紬, “各色綿紬, 前以白絲貿來織造矣, 正宗 乙卯(1795)以我國絲所織綿紬”), 倭銀 유입이 정지된 18세기 말의 시점에서 국산 생사로 변경했다. 그들 역시 어떤 형태로든 倭銀의 분배와 유통에 관여했다는 것은 확실하며, 20세기 초의 시점에서도 塵의 공유재산으

만주족의 발흥과 함께 불안정화하고, 명과 후금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던 遼東의 정세 때문에 중국과의 육로교역이 폐쇄되었고, 그 결과 쓰시마가 기대할 정도의 중국산 물자가 동래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산 생사와 일본산 은의 대량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명청 교체 후인 17세기 후반이었다.⁵²⁾ 이러한 조일 간의 주요 거래품목의 변화는 일본에서 본 조일무역이 16세기까지 조선상품인 면포나 쌀 등을 요구하는 무역에서 중국산 생사를 요구하는 중계무역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일무역의 성쇠와 조일무역의 성쇠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청은 동남 연안에 거점을 갖고 해외무역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반청세력 정씨 집단의 경제기반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1656년에 海禁令, 1661년에는 遷界令을 내려 복건, 광둥 등의 주민과 정씨 세력의 제후를 차단하려고 했다. 이 해금과 천계령이 폐지되고 해외도항이 합법화된 것이 정씨 항복 이후인 1684년이지만, 그것과 아울러 에도막부는 예상되는 중국선 내항의 격증에 대응하여 일본으로 來航하는 선박수를 70척, 무역액은 1년간 6000貫 정도로 제한하고, 생사에 대해서도 한때 폐지되었던 이토와푸(糸割符) 상인을 부흥시켰다(貞享令).⁵³⁾ 이것은 은 수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경쟁 입찰로 결정되어 있던 수입가격의 상승이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때까지 중국에 대한 은 수출은 1648년부터 1672년까지 25년간의 연평균 수출액은 7757貫 988匁이고, 1673년에서 1684년까지 12년간의 연평균 수출액은 5952貫 044匁이었다. 청의 해금이나 천계령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근거지를 둔 정씨 세력뿐만 아니라, 정씨 세력권 밖인 복건 등지의 왕이 보낸 선박도 來航하여 대일무역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거꾸로 천계령이 폐지된 후 막부의 은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1685년에서 1697년까지 13년간은 연평균 228貫 699匁으로까지 격감했다.⁵⁴⁾ 중국제 수입품은 17세기 후반부터 은을 대신하여 구리가 鑄錢 재료로서 대량으로 수요되기에 이르렀으며, 1696년에는 694만근에 달

로서 倭銀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2) 生糸와 교환되는 은의 흐름에 대하여, 李哲成, 2000 《朝鮮後期對淸貿易史研究》(國學資料院)에서는 17세기 후반 조선에서 북경으로 가는 역관들이 官銀을 대출받고, 이것을 중국에서 生糸로 바꾸며, 이 生糸를 倭館에 판매하고 銀을 입수하여 官銀을 상환한다(65쪽)고 서술했다. 큰 줄거리는 대체로 그와 같다고 생각되지만, 상도중에 한성상인, 동래상인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는 어떻게 시중에 은이 유출되는지, 원금이 되는 官銀의 축적 과정은 어떠한지 등등 구체적인 과정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53) 나가사키 무역과 貞享令을 비롯한 에도막부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관해서는 山脇悌二郎, 1964 《長崎の唐人貿易》(吉川弘文館)에 의함.

54) 이상의 은 수출에 관한 숫자는 앞의 《對外關係史》 171에 의함.

했다. 이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의 구리 채굴은 1727년에 雲南에서 연간 삼백 수십만 근이 채굴되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동전 재료는 부족했으며 18세기의 주요한 수입품은 구리였다.⁵⁵⁾

이에 비하여 1684년부터 1710년까지 쓰시마의 조선에 대한 연평균 은 수출액은 1685관 남짓이었으며,⁵⁶⁾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는 일본의 주요한 은 수출 경로가 막부 직할지이며 제한이 엄격한 나가사키에서 쓰시마 경유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산 생사의 수입에 있어서도 1688년에는 중국, 네덜란드 선박의 합계가 99,860근인 것에 비하여, 쓰시마의 수입은 102,119근이며 나가사키를 상회하고 있었다. 가격 면에서도 일단 조선을 경유하면서도 쓰시마번이 직접 교토시장에 수송·매각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직접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생사가 이토와푸 상인, 나가사키 본 상인, 각 번의 상인의 손을 거쳐서 교토로 들어오는 것 보다 오히려 염가였다고 한다.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에 따르면, 100근당 나가사키의 이토와푸 상인의 구입가격이 1688년에 은으로 2貫 728匁인 것에 비하여, 쓰시마의 수입가격은 2貫 496匁, 1711년에 5개 지역 糸割符 4貫 030匁에 대하여 쓰시마 3貫 610匁이었다.⁵⁷⁾

요컨대 17세기의 조일무역은 나가사키에서 中日의 생사·은 무역의 성쇠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중계무역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17~18세기의 일본이 모방·도입해야 하는 선진문물은 무엇이이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가 형성기의 일본열도에 대하여 한반도의 백제, 그리고 고구려는 선진문물의 제공원임과 동시에 선진제도의 국가였다. 율령국가체제의 형성에 통일신라

55) 이상의 구리 무역에 관한 숫자는 앞의 《對外關係史》 173~174쪽에 의함.

56) 田代和生, 《앞 책》 323

57) 田代和生, 《앞 책》, 283. 다시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의 이토와푸 상인의 구입가격은 일본 국내의 물가대책으로 ‘납입금’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예를 들어서 緞子(돌을무늬로 짠 비단) 1본이 교토에서 360匁인 경우, 나가사키부교(長崎奉行)가 원가를 100匁(1匁=3.75g, 이것이 중국상인에게 사는 구입가격)이라고 판정했다면 24할의 납입금을 내고, 입찰상인에게 340匁에 매각하는 것이며, 입찰 과열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또한 수입가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차액 240匁이 나가사키 町人에 대한 분배금, 나가사키 會所の 운전자금을 비롯하여 구리무역의 운전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712년의 正徳新令부터는 생사에 대한 납입금이 폐지되고, 막부에 대한 運上金도 폐지되었다.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옷감 7할, 藥種 10할 등 평균 9할 7푼 5리를 唐船貨物에서 징수하고 있었다. 山脇, 《앞 책》 55~61, 149~150.. 쓰시마에서 들어오는 생사가 나가사키의 생사보다 약간 염가였던 것은 수송비용과 상인의 이익분배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처럼 나가사키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쓰시마번은 교토 부근에서의 시장가격과 나가사키에서의 구매 가격을 정보로서 입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측과 가격을 교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로부터 들어오는 지식이 불가결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명국가였던 중국과의 직접통교가 확대됨과 동시에 일본의 위정자에게 한반도 국가의 문화적, 정치적 중요성은 후퇴해 갔다.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송, 일본과 원, 일본과 명의 교역기간을 통하여 ‘唐物’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직접 특권적인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는 유럽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중국과는 다른 문화의 존재를 알과 동시에 신기한 유럽산 물건에 눈길을 빼앗긴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류큐보다 더 남쪽의 해역세계,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한 정보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무력으로 일본 통일을 달성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중국은 더 이상 무력으로 정복해야 할 문명의 대국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도시대로 들어와서 책봉을 전제로 하는 중국과 일본의 국교회복은 이미 불가능했지만, 그럼에도 고도로 발달한 중국산 수공업 제품, 서적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공업 생산과 농업생산 기술은 17~18세기의 일본에서 급속히 향상되고, 수입에 의존하였던 생사나 설탕 등도 점차 국산화되어 갔다. 한편 나가사키를 네덜란드에 대한 창구로 열고 있던 일본에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지만, 18세기에는 한역본의 수입, 더욱이 네덜란드어 원본의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실용적인 의학과 本草學을 시작으로 수입과 번역의 학문인 蘭學이 생겨나고, 게다가 19세기에는 지리서와 군사학 서적 등까지 수입·번역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동남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정보도 입수하였다. 18세기 말 이후 일본 지식인의 눈으로 본 문명의 중심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위치를 바꾸어 갔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근세 유학, 특히 관학화된 유학이 被虜人으로서 일본에 머물렀던 조선의 관리 姜沆에게 연원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강항의 학문은 이퇴계의 학통에 속함과 동시에 강항으로부터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하야시 라잔(林羅山)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臨濟宗 五山僧의 兼學이었던 유학이 이 무렵에 이르러서 정통화되고, 유학이 유학으로서 학습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사의 治者道德으로서 유학은 무사층에게 보급되어 간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관리등용 시험인 科擧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主君과 家臣의 ‘家同士’의 御恩과 奉公 관계에 따라 구축되어 있던 근세 일본사회에서 유학은 어디까지나 敎訓 내지 교양이었으며, ‘朱子家禮’에서 말하는 유교식 장례와 제례, 의례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그 기반이기도 한 가족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본에 온 통신사 일행에 대하여 일본의 文人들이 다양한 교류를 원하고, 그 墨跡을 얻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굳이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인이 쓴 것도 조선으로 가져갔다. 明和 원년(1764)에來日했던 통신사 일행 중에 正使書記였던 成大中, 副使書記였던 元重舉는 일본 문인들에게서 받은 書畵를 조선에 전하고 있으며, 그들과 교류가 있던 실학자 李德馨 역시 元重舉 일행을 통하여 일본에 관한 지식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풍류와 文雅를 높이 평가했고, 일본을 夷狄으로 간주하고 그 문물을 무시하려는 조선의 풍조를 한탄했다.⁵⁸⁾

또한 조선에서 간행된 刊本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柳成龍의 《懲毖錄》처럼 文祿·慶長の 役(임진왜란)을 조선쪽에서 기술한 서적에 대하여 일본 쪽에서는 軍記物로서의 관심 때문이었는지, 조선쪽의 군사기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관을 통해서 입수했던 모양인데, 17세기 말에는 한문본 그대로 간행되었다.⁵⁹⁾ 에도시대에 있어서 조선책의 수입과 간행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반대로 李瀾에 따르면, 조선에 전해지지 않은 中國典籍으로서 《性理字義》, 《三韻通考》는 일본에서 전해졌고, 조선에서 亡失된 《李相國集》이 일본에서 전래되어 復刊되었다고 한다.⁶⁰⁾

통신사나 왜관을 통한 한일의 문화적 교류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문물이 전해졌다는 문맥으로 논의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와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은 李德懋가 지적했듯이 당시의 조선에 존재했던 일본에 대한 멸시 감각이, 반대로 일본에 존재했던 외국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필터가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VIII. 맺음말

17~18세기의 한일관계를 동아시아 속에서 생각하는 단서로서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에서 정해진 규칙인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접근방법을 이용했다. 이것은 동아시아에 있

58) 李元植, 1997 《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 556~558

59) 末松保和, 1984.1 <歴史家としての西厓柳成龍> 《朝鮮學報》 110에 의하면 1642년에 《懲毖錄》의 일부가 포함된 《軍門謄錄》, 기타 柳成龍의 저작이 포함된 刊本 16권이 간행되었는데, 일부인 《懲毖錄》은 일본에서 1688년에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이 서문을 붙이고 《異称日本伝》으로 절반 정도가 1693년에 간행되었고, 1695년에는 2권짜리로 全文이 교토에서 간행되었다.

60) 李元植, 《위 책》 555

어서 교역과 국가 간의 관계를 하나의 시스템의 변천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과 교역을 일체화했던, 明初에 성립했던 政經一體의 틀이며, 또 하나는 책봉·조공과 교역과는 별도로 성립하는 互市關係이다. 일본은 전자의 틀 속에서는 이단아, 문제아라고도 할 만한 존재였고, 거꾸로 한국은 그 책봉질서를 내면화한 우등생으로 행동하려 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상업이 활성화되는 와중에 일본은 은 산출국으로서 상업 활성화의 한 動因을 제공하였고, 유럽인과 동남아시아 각 지역 및 중국과의 새로운 경제·외교관계를 성립시켰다. 그렇게 열린 대외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1630년대에는 기독교 금지를 목적으로 일본인의 해외도항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교역 상대국을 제한했다. 그때 선택된 막부장군의 대외 호칭이 ‘大君’이었다.

중국은 16세기 중반에는 政經一體의 교역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했고, 명에 이어 집권한 청나라 역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책봉관계가 없는 교역만의 관계를 승인했다. 한일 관계도 역시 중화 황제에 의한 일본국왕의 책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나 양국이 대등한 교린관계로 변해 간다.

한국은 원 복속기에 위로부터, 밖으로부터의 상업화에 대항하는 형태로 명과 마찬가지로 폐쇄된 국내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중국과의 대외교역에 대해서도 官에 의한 장악이라는 틀을 마지막까지 크게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 내부에서 상업의 활성화는 왕조의 물자조달 방식을 변경시켰고, 17세기 중반에는 동래-서울-북경을 연결하는 半官半民의인 상인들에 의하여 대일 중계무역의 물류 루트가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중요 수출상품인 은은 17세기 후반에는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산 생사의 대가로서 대량으로 수출되기에 이르지만, 17세기 말에는 먼저 나가사키에서의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18세기에 들어서는 쓰시마에서의 수출도 제한된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품은 구리가 주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중요 수입품이었던 생사는 점차 일본에서 국산화가 진행되어 수입상품으로서의 위치를 잃었다. 한편, 한국에서 수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수입품인 인삼 역시 18세기 중반에는 국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일무역 자체가 18세기 후반에는 크게 쇠퇴하였다.

경제적인 관계가 축소되어 가는 한편에서,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일행은 태평한 속에서 유학적 교양이 확산되던 일본의 문인들에게 환영받았다. 또한 조선인 행렬이나 조선인을 묘사한 名所圖繪 등도 작성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文雅에 대한 평가도 하면서, 일

본사회가 가지고 있던 異國 사람들이나 異國의 풍속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